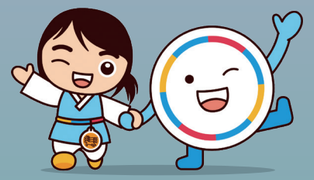
국민콜 110(정부민원안내)
부패·공익침해신고 상담 1398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600-8172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 www.clean.go.kr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

국민의 권익을 높이는 ACRC

SUMMER

2021. Vol 69

국민권익위원회

# Contents

SUMMER 2021
vol. 69

**표 지 이 야 기**

2021 <국민권익>은 '변화의 스위치를 켜다'는 주제로 새로운 삶의 방식에 적응하며 더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발행일** 2021년 7월 9일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전현희
**편집인** 허재우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우 30102)
**전화** 044-200-7081
**팩스** 044-200-7911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naver.com/loveacrc
**트위터** twi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loveacrc
**기획·디자인·인쇄** 더에이치(주) 031-247-5141

## 변화를 만드는 우리

04
**권익은 지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08
**권익, 삶을 말하다**
지심도 '주민-행정' 갈등 현장에서 상생 방안을 찾다

12
**숫자로 보는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4년의 주요 정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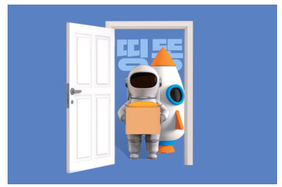
14
**권익 빅데이터**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16
**ACRC News**
국민권익위 주요 소식

## 함께 나누는 이야기

19
**권익비전**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한 80일간의 전국 청렴 대장정

23
**이 달의 키워드**
호우·장마



24
**세상을 읽다**
지금 드리러 갑니다 '배달 앱 전성시대'

26
**권익 포커스**
권익을 찾아 스위치 ON

30
**권익 바로세우기**
권익이, 달라집니다!

## 국민권익 더하기

32
**청렴이와 권익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죽음,
국선대리인을 통한 행정심판 권리구제

34
**그들이 사는 세상**
국민권익위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사람들
'기획재정담당관실'

38
**시간을 걷다**
아픔을 보듬는 치유의 섬, 동백섬 '지심도'

44
**청렴한 수기**
2020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기 부문 최우수상

48
**국민 생각함**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50
**#권익**
독자의 소리 / 권익위 열독왕

# 정의의 이름으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추구 행위를 원천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드디어 공포됐다. 앞으로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과연 어떤 법이고 무엇이 달라지는 지 살펴보자.**

**Writer.** 편집실

1

2

### 반부패의 핵심, '이해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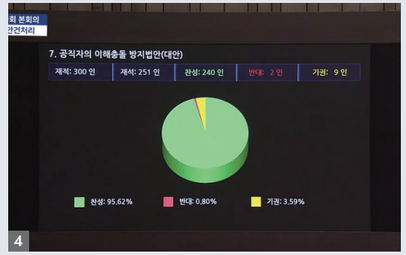
지난 2016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공직사회에는 '청렴한 기운'이 불어왔다. 기존과는 달라진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생겼다. 하지만, 당시 이 청탁금지법에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있다는 비판의 여론이 있었다. 그건 바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었다.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던 것 때문에 애써 마련한 청탁금지법의 효력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이들도 있었다.

다행히 청탁금지법은 우리사회 곳곳에 자리잡았고 공직기강도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그런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의 LH 사태가 대표적이다. LH 사태와 같은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만약 이해충돌방지법이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통해 이렇게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정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공직자 가족의 채용,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 법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어 보다 명확하게 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利害衝突防止法

3



4

1. 전현희 위원장 이해충돌 방지법 강연 모습
2.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3. 공공기관 대상 부패방지 특별교육
4.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통과됐다.

## 국민권익위, 한 걸음 더 전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회의원, 시도의원, 공기업 등을 포함해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강력한 처벌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이해충돌 관련 공무원 행동강령의 주무부처로서, 법 시행 전이지만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위반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나가며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다해 나갈 것이다.

먼저, 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연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향후 1년 간 법 적용대상자인 약 200만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제도 운영의 세부사항을 설명한 업무지침을 작성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도 법을 쉽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5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행위 5가지, 총 10가지의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신고·제출 의무>**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제5조)**

공직자는 사적이해관계자(대리인 포함)를 대상으로 16개 유형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업무를 회피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제6조)**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이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지 않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라 하더라도 택지개발, 지구 지정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동일하게 신고 의무 부과

**③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8조)**

고위공직자는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

공직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부동산 등 사적 거래시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제15조)**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공직자가 아니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의 자에 한함)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제한·금지 행위>**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10조)**

직무 관련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⑦ 가족 채용 제한(제11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공개채용 등 경쟁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2조)**

공공기관(산하기관, 자회사 포함)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허용)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제13조)**

공공기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제14조, 제27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 위반 시 조치사항

### 만약, 어긴다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부당이득 환수 등 이해충돌방지접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

1. 직무상 비밀, 소속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면?
   ⇨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2. 공직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 취득한 비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지심도 ‘주민-행정’ 갈등

## 현장에서 상생 방안을 찾다

相生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 속한 작은 섬 지심도. 오랜 기간 지심도 소유권은 국방부에 있었으나 2017년 거제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거제시가 지심도 일대에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섬 주민들과 이견이 생겼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조정에 나섰고 오랜 노력 끝에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냈다.

**Writer.** 배미진 **Photo.** 조병우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
지심도 주민대표 서명봉,
거제시장 변광용,
거제시의회 의장 옥영문,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홍정섭

### 거제시-지심도 주민 간 갈등

지심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포함된 0.33㎢(해안선 길이 3.6㎞)의 작은 섬으로 동백꽃으로 유명하다. 현재 15가구 3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고 대부분 관광객을 상대로 식당과 민박을 운영하고 있다.

지심도는 일본군이 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킨 뒤 병참기지로 사용하다 해방 후 소유권이 국방부로 넘어간 곳이다. 해방 이후 지심도에 들어온 주민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지만, 일부 건축물에 대한 권리만 인정되었다. 2017년 3월 지심도에 대한 소유권이 국방부에서 거제시로 이전됐고 시는 섬 관광개발을 추진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불거졌다.

거제시는 섬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지심도 원시림을 그대로 보존·관리해 자연과 생태, 역사와 스토리가 어우러진 명품 테마 관광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관광섬 개발 밑그림엔 주민 이주도 포함돼 있었다. 섬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온 주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거제시와 시민들간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지심도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인정해달라 말했다. 그리고 섬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지심도 갈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고 조정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지심도 갈등 해결 및
상생 방안에 대해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이 있는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원만한 상생 방안을 만들어
사회갈등을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심도 주민에게 고충을 듣고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상생 조정방안 협약 후 주민들과의 기념촬영

## 국민권익위원회 중재 나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1월 13일 민원 해결을 위해 지심도를 방문했다. 주민들의 거주 실태 및 지심도의 자연환경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주민대표의 의견을 들었고 거제시청을 방문해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서 국민권익위는 거제시에 "국민권익위는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지금까지 다양한 갈등 해결의 노하우가 있는바, 이를 바탕으로 지심도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조정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지심도 갈등 해결 및 상생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주민대표와 환경부, 거제시, 거제시의회, 국립공원공단이 참여하는 갈등조정협의체가 구성됐고 지난해 12월 3일 첫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지심도 개발사업이 주민들과 공존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이후에도 국민권익위는 여섯 차례 거제시를 방문하고 주민과 주민대표를 찾아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거제시장과 거제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올해 4월 13일 조정안을 마련하고 3차례 조정 실무회의를 여는 등 주민들과 거제시 및 관계기관 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조정서 협약

지난 6월 1일 국민권익위는 지심도 구(舊)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민원인 대표, 거제시장, 거제시의회 의장, 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조정 결과 거제시는 첫째, 지심도 거주를 원하는 주민에게 2006년 이전 국방부 자료에 기재된 면적만큼 토지 사용을 허가하고 둘째, 지심도 거주를 원하는 주민 중 민박 운영을 계속하고자 하는 주민은 건축물 대장에 기록된 면적만큼 민박 영업을 허가하기로 했다. 한편 지심도 거주를 원하는 주민 중 민박 영업을 포기하는 주민에겐 국방과학연구소 내 상업시설 운영권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이주를 원하는 주민은 토지보상법을 준용해 보상하기로 했다.

거제, 지심도 이주 갈등 고충 민원 조정 회의 후 언론 인터뷰 중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촬영 시 마스크를 잠깐 벗었습니다.

거제시의회와 환경부는 주민들이 지심도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거제시에서 추진하는 지심도 관광 명소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전현희 위원장, 변광용 거제시장, 지심도 주민대표, 옥영문 거제시의회 의장,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거제시와 지심도 주민들이 상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서에 서명했다.

서명봉 지심도 주민대표는 "조정이 되기까지 노력해주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남은 기간 원만하게 주민들과 합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심도 주민 갈등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환경부, 거제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지심도 주민들과의 상호 소통과 신뢰, 협의를 바탕으로 지심도가 명품 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10개월간 관계기관과 주민 사이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서로가 양보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어냈다. 이번 조정은 이해당사자들이 똑

지심도의 이곳 저곳을 돌아보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같이 양보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데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이 있는 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원만한 상생 방안을 만들어내 사회갈등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거제시, 지심도 주민 간 해묵은 이주 갈등 집단민원 현장조정 회의

# 국민에게 힘이되는 든든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범정부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정부 출범 4년간 반부패 공정 개혁을 지속·추진, 국가청렴도 4년 연속 상승 및 역대 최고 순위인 33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또한 우리나라 대표 국가 옴부즈만으로서 6만 5천여 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다. 지난 4년간 국민권익위가 도출한 성과들을 살펴보자.

**Writer.** 편집실

## 부패방지 분야 주요 성과

### 국가청렴도 4년 연속 상승

33위

역대 최고 점수와 순위인 61점, 33위 기록

### 이해충돌방지법 9년만에 국회 통과

이해충돌 방지법 9 년만에 통과

200만 공직자의 사익추구 방지제도 완비

###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대책 추진

3,400 여명

약 3,400여명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471 개

284개 → 471개로 대폭 확대

### 나라 곳간 지키는 공공재정환수법

453 억 원 환수

부정청구 52,995건 453억 원 환수
45건에 대해 2억 6천만 원 제재부가금 부과

### 집단민원 244건 적극 조정

244 건 조정

10만여 명의 지역주민 숙원 해결, 갈등 해소
(주요 사례 : 강원도 양구군 무주부동산 문제 해결)

## 공익보호 분야 주요 성과

### 고충민원 6만 5천여 건 처리

65,000 건 해결

약 16만여 명 국민의 권익을 구제

### 소송보다 신속한 행정심판

10,538 건 행정심판

10,538건의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권익침해 해소

### 총 235건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

235 건 제도개선

부패 취약분야와 고충·민원 빈발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 대한민국 대표 국민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 35 만명 참여

35만 명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활성화 성공

###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57,000 여 건 민원상담

한 곳에서 한 번에 해결하는 민원.
5만 7천여 건 민원상담 및 해결.

### 국민권익위원회 4년의 주요 정책성과

## 한 눈에 봐요

### 부패·공익신고 처리

부패신고처리 총 2,130건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처리 총 2,758건
공익신고처리 총 17,154건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총 830건 보호사건 중 696건 처리
총 194억 원 보·포상금 지급

# 빅데이터로 보는 국민의 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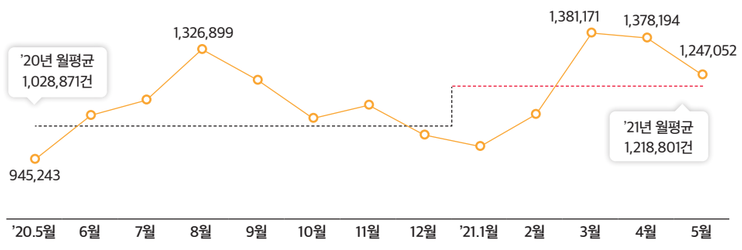
민원 빅데이터는 민원 현황을 실시간 공개함으로써 각종 연구와 상품,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원동향 분석을 통해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내일을 계획한다. 이번 호에서는 <2021년 5월 민원동향>을 살펴본다.

**Writer.**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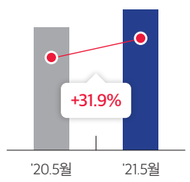
## 민원 추이

+ 2021년 5월 민원 발생량은 총 1,247,052건
+ 전년 동월(945,243건) 대비 31.9% 증가, 전월(1,378,194건) 대비 9.5% 감소

*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올)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통계('21. 6. 6. 15시 추출)




전년 동월 대비 현황




## 신청인 현황

+ 연령별로는 **30대(45.3%)**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26.9%, 50대 14.5% 등의 순
+ 성별로는 **남성 68.0%**, 여성 32.0%로 남성 신청자가 많음

※ 연령과 성별이 확인된 398,778건 대상

연령별 현황

| | |
|---|---|
| 20대 이하 | 6.6% |
| 30대 | 45.3% |
| 40대 | 26.9% |
| 50대 | 14.5% |
| 60대 이상 | 6.6% |

성별 현황

| | |
|---|---|
| 남성 | 68.0% |
| 여성 | 3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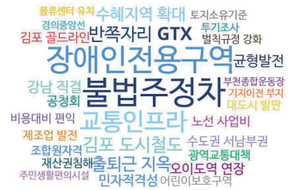
## 분야별 현황

증가율 상위 분야

| 세무 | 체육 | 교육 | 법무 | 사법 |
|---|---|---|---|---|
| 66.5%↑ | 23.3%↑ | 21.8%↑ | 19.9%↑ | 19.1%↑ |

※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등 세무 분야 증가

## 민원키워드




+ 주요 민원키워드는 불법주정차, 장애인전용구역, 교통인프라, 김포 도시철도, 반쪽자리 GTX, 출퇴근 지옥, 수혜지역 확대, 강남 직결 등
+ 교통인프라, 김포 도시철도, 반쪽자리 GTX, 출퇴근 지옥, 수혜지역 확대, 강남 직결 등 'GTX-D 노선'과 관련된 민원키워드가 상당수 차지

Top 30 키워드

| 순위 | 키워드 | 순위 | 키워드 | 순위 | 키워드 |
|---|---|---|---|---|---|
| 1 | 불법주정차 | 11 | 공청회 | 21 | 재산권침해 |
| 2 | 장애인 전용구역 | 12 | 노선 사업비 | 22 | 어린이보호구역 |
| 3 | 교통인프라 | 13 | 오이도역 연장 | 23 | 토지소유기준 |
| 4 | 김포 도시철도 | 14 | 수도권 서남부권 | 24 | 벌칙규정 강화 |
| 5 | 반쪽자리 GTX | 15 | 비용대비 편익 | 25 | 경의중앙선 |
| 6 | 출퇴근 지옥 | 16 | 김포 골드라인 | 26 | 투기조사 |
| 7 | 수혜지역 확대 | 17 | 제조업 발전 | 27 | 부천종합운동장 |
| 8 | 강남 직결 | 18 | 대도시 발판 | 28 | 주민생활편의시설 |
| 9 | 균형발전 | 19 | 광역교통대책 | 29 | 기지이전 부지 |
| 10 | 민자적격성 | 20 | 조합원자격 | 30 | 물류센터 유치 |

## ❶ 공직기강 확립 위한 반부패 10대 과제 추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3월 29일 제7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의 근원적인 예방에 대한 반부패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등 각종 반부패 정책의 이행과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에 규정된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퇴직자가 재취업한 공기업에 채용비리 근절추진단을 투입하여 긴급 점검을 하는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에 대해 형사처벌·과태료 대신 내부 징계에 그친 부적절한 처리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재정환수와 관련하여 '상시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중앙·지방·교육기관에 대한 부정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를 추진한다. 이어 6월 30일까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고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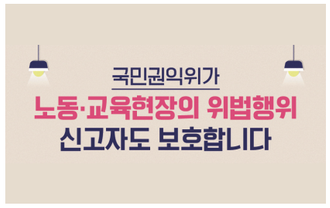
**자세히 알아보기**
청렴정책총괄과 044-200-7613 심사기획과 044-200-7694 제도개선총괄과 044-200-7218 민간협력담당관 044-200-7163

## ❷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등 청렴성 제고 위한 협업 추진

국민권익위는 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10대 실천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1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부터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했다.
그 시작으로 국민권익위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경기도는 협약에 따라 직위와 직무 상 비밀 등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적극적·선제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공직자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강화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경기도를 시작으로 경북, 경남, 제주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들과도 순차적으로 반부패·권익보호 정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자세히 알아보기**
기획재정담당관실 044-200-7112

## ❸ 입시비리, 근로강요 이제 공익신고로 보호받는다




앞으로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역대 최대로 확대(284개→467개)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된 4개 법률은 교육현장과 근로현장에서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대상법률 추가로 임산부에게 야간근로를 시키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행위,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행위, 학교법인의 수익을 사립학교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는 행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대입시험 문제를 유출·유포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자세히 알아보기**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2

## ❹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 갈등 조정 최종 확인

국민권익위가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를 최종 확인함으로써, 삼성생명에게 1997년 매각된 이후 닫혀 있었던 송현동 땅이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24년 만에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통해 서울특별시민에게 개방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 서울특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명 완료한 조정서를 소위원회를 거쳐 26일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정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여 서명한 당사자들에게 조정내용을 이행할 법적구속력이 생긴다.
국민권익위는 신속한 부지 매각이 급선무였던 대한항공,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을 위한 부지가 필요한 LH공사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합의안을 도출해 냈다.

**자세히 알아보기**
기업고충민원팀 044-200-7832

# ACRC NEWS



## ❺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포안이 지난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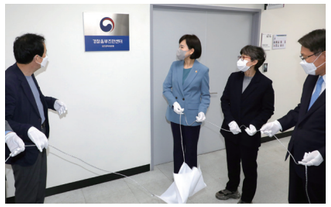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처음 제출한 이후, 지난 달 29일 제21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됨으로써 9년만에 입법화된 법률로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행위를 제재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준비 계획'을 보고하였으며, 앞으로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히 알아보기**
행동강령과·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준비 TF
044-200-7675

## ❻ 경찰옴부즈만 센터 공식 출범



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 활동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경찰옴부즈만 센터"가 출범했다. 이번 경찰옴부즈만센터는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 등 관련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2006년 12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국민권익위로 접수된 24,528건의 경찰관련 민원을 서면·실지·출석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고 이 중 3,932건의 국민고충을 해결했다.

앞으로도 수사 등 경찰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권익침해를 받은 국민은 누구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최근 경찰옴부즈만 센터 출범에 따라 민원인은 접수단계부터 집중 상담을 받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자세히 알아보기**
경찰민원과 044-200-7388

## 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요청서를 접수받은 후 4월 1일 특별조사단을 구성, 위법사항을 조사해 6월 7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즉시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現 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했다.

특별조사단은 관계기관을 통해 부동산거래 내역 및 보유현황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심층적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됐으며 국민권익위는 이를 국민권익위 관련 법령상 원칙대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고 더불어민주당에도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자세히 알아보기**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 044-200-7415

'반부패·권익증진' 총력전!

#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한 80일간의 전국 청렴 대장정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반부패·권익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80일 간의 청렴 대장정을 가졌다.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진행한 이번 대장정을 통해,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업무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Writer.** 편집실

**2021. 04. 02.**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그런 정상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입니다."

**2021. 04. 19.**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0.**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경북은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청렴'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키우고 있습니다. 청렴과 공정으로 지속가능한 경북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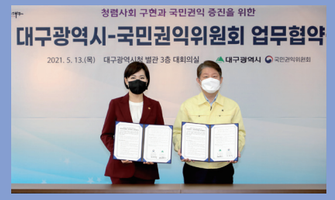
**2021. 05. 03.**

**최문순 강원도지사** "강원도와 국민권익위가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중요한 가치에 조화롭게 공명할 수 있는 울림통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1. 05. 12.**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반부패와 국민권익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상호 공감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변화의 계기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2021. 05. 13.**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문화 조성은 물론, 국민이 원하는 시대 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21. 05. 27.**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공직자의 청렴이 가장 절실한 시기에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와 더욱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21. 05. 26.**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와 공정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민관 협력을 통해 깨끗하고 청렴한 울산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21. 05. 25.**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공직사회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율성 있는 청렴시책을 적극추진해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 05. 20.**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의결된 지금,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 더 투명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021. 05. 18.**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올 한해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청렴한 세종 실현'을 목표로 시민 체감형 반부패·청렴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1. 05. 14.**

**양승조 충청남도지사** "대한민국의 청렴사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국민권익위와 청렴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힘을 모으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2021. 05. 28.**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고충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21. 06. 03.**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아무리 혁신적인 정책도 청렴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패와 반칙, 특권 없는 광주를 실현하겠습니다."

**2021. 06. 10.**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우리 사회가 빠르게 압축성장을 하면서 공직사회의 기준과 국민들의 눈높이가 차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빨리 일치시켜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2021. 06. 16.**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청렴과 반부패, 국민권익 증진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회적 가치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청렴과 공정이 상시적 규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06. 17.**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은 우리 사회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책무입니다. 청렴과 관련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발맞춰 노력하겠습니다."

## 전국 17개 시도와 청렴 MOU

# 국민권익위, 17개 시도 반부패 업무협약 체결 완료

지난 4월 2일 경기도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국민권익위는 전국 방방곡곡을 직접 방문하여 전국 17개 시도 모든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청렴 대장정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정부가 하나로 똘똘 뭉쳐 우리 정부의 반부패 혁신과 쇄신 의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며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광역시도와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재점검하고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반부패 권익 보호를 위한 세부 협력사업 등의 후속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6월의 관심키워드 : 호우·장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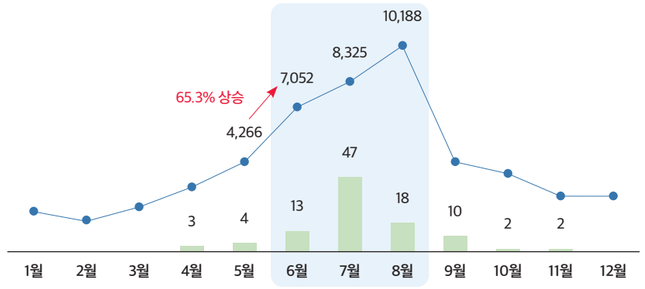
**매년 국지성 호우,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배수시설 점검 및 피해 복구 등에 대한 민원 발생 예상**

## 민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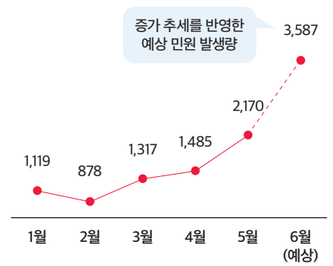
+ 최근 3년 5개월간('18. 1월~'21. 5월) '호우·장마' 관련 민원은 총 57,777건으로 국지성 호우 및 장마가 시작되는 6월부터 증가하여 8월까지 다수 발생

* 최근 10년간('09년~'18년) 발생한 호우·장마 피해 108건 중 87건(80.6%)이 6~8월에 발생(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포털)

<최근 3년('18~'20)간 월별 민원 추이(합산)>




<'21. 1~5월 민원 추이>




## 민원 사례

**[호우·장마 피해지역 조속한 복구]**

• 저희 부모님이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지하층 침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공사 및 조합에 대해 침수피해 복구 요청 등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0. 7월, 광주 북구)

**[재산 피해 등에 대한 보상·지원 요청]**

• 집중호우로 축대 붕괴 및 집의 기초가 드러나는 피해를 입고, 이재민 생활 후 돌아왔습니다. 축대 붕괴 등 피해 구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 8월, 충남 계룡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시설 점검·정비 요청]**

• 이면도로변 배수로에 퇴적물이 많아 비가 조금만 와도 역류합니다. 장마에 상습침수를 겪는 사업장들이 있는 곳이니 빠른 시일 내 조치 바랍니다. ('21. 5월, 부산 금정구)

**[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정비, 토사붕괴 등 조치 요청]**

• 유동인구가 많은 길가에 아주 높은 토사가 약한 그물망 하나로 위태롭게 방치되어 있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라도 내리면 토사가 무너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립니다. ('21. 4월, 경기 남양주시)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요청사항 등 기타건의]**

• 작년 장마철에 엄청난 양의 수로물이 내려와 시골집 뒤쪽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사전에 수방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21. 5월, 충남 부여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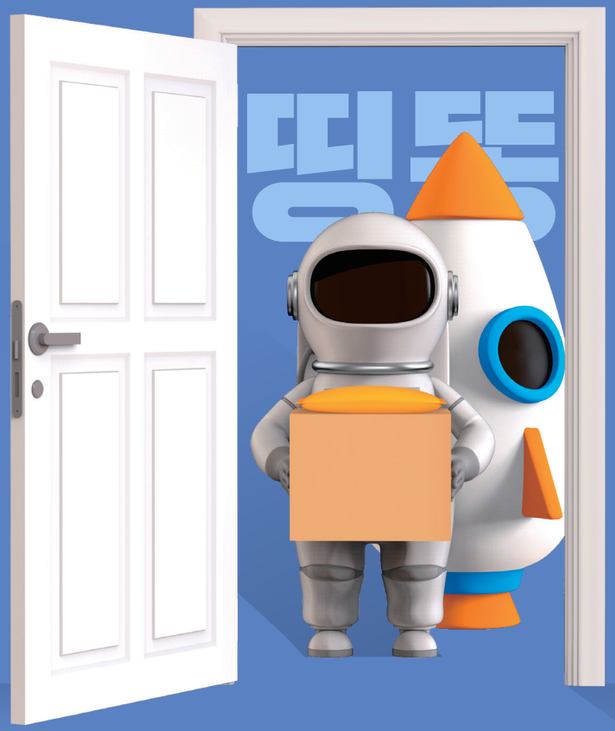
KEY WORD

# 지금 드리러 갑니다

# 배 달 – 앱 전 성 시 대

**"금 나와라. 뚝딱!" 전래동화에나 나올법한 도깨비방망이는 현대에 들어 '배달 앱'으로 분했다. 식사와 디저트뿐만 아니라 편의점, 전통시장 내 상품까지 배달 앱만 두드리면 뚝딱하고 집 앞으로 가져다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 서비스는 소비의 새로운 표준(New Normal)이 됐다.**

**Writer.** 이성미(트렌드 칼럼니스트)




## 언택트 사회가 키운 배달 앱 시장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는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외부 활동과 집단 활동이 금지됐고, 이로 인해 근무, 여가, 소비 등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비대면 문화가 확산했다. 비대면 사회에서 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은 배달 앱 시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배달 음식 거래액은 2019년 9조 7천억 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17조 3천억 원을 기록했다. '오픈서베이 배달 서비스 트렌드 리포트 2021'에 따르면 음식 배달 서비스 방법은 전문 웹/앱을 통한 이용이 73.9%로 지난해 대비 14.4%P 증가했고, 전화 주문은 15.9%로 11.5%P 감소했다. 또 배달 서비스 이용자의 약 66%는 주 1회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다. 수치만 봐도 배달 서비스가 얼마나 일상화됐으며, 배달 앱 시장은 또 얼마나 성장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수치를 떠나 집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얼마나 자주 들리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배달 종사자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만 떠올려 봐도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배달이 늘어난 만큼, 식당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먹고 대화하는 자리는 줄었다. 대신 배달 앱을 통해 새로운 소통 방식이 생겼다. 판매자는 배달 음식에 재치 있고 창의적인 멘트를 적어 보내며 고객을 웃게 하고, 여기에 소비자는 센스 넘치는 후기로 보답한다. 또 거리두기로 인해 "밥 먹자"는 말이 사라진 대신 사람들은 배달 앱을 통해 지인에게 밥을 선물한다. 앱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판매자와 소통도 한다.

## 원하는 것은 배달 앱 속에 다 있다

배달 시장의 확대는 배달 품목도 바꾸었다. 과거에는 치킨, 피자, 족발 등의 야식이 이른바 '배달 음식'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오히려 분식, 일식, 커피 및 음료 등의 주문이 늘며 배달 음식의 경계가 사라졌다. 사람들은 반찬과 손질 과일을 주문하고, 영화관에서나 보던 팝콘 세트도 집에서 받아든다. 심지어 약국에서 약을 배달하는 서비스까지 있다.

배달 앱 성장세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공공배달 앱을 선보이고 있다. 공공배달 앱은 소상공인의 민간 배달 앱 이용 수수료와 마케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 지자체가 출시한 서비스다. 지역화폐 서비스와 연계해 이용자에게도 할인 혜택을 준다. 또 이들 공공배달 앱은 전통시장과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를 소비자와 배달 종사자는 함께 이겨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상생하고 배려와 존중, 권익 보호를 통해 세상 곳곳에 더 많은 행복이 배달되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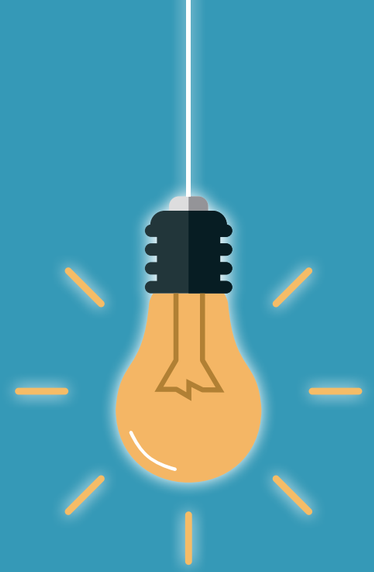
전국 1호 공공배달 서비스는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만든 '배달서구'로, 지난 1월 출시 1년 만에 누적 주문액 100억 원을 달성했다.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특급'도 출시 한 달 만에 가입자 11만 명을 확보했다. 배달특급의 최대 장점은 수수료가 1%라는 것.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배달 앱 가맹점 수가 민간 앱을 앞지르기도 했다.

## 배달 시장의 빛과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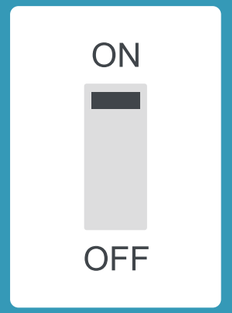
성장에는 성장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배달시장의 성장에도 자영업자의 수수료 및 마케팅 부담 가중, 배달 사고 급증, 별점 테러와 악성 후기로 인한 자영업자-고객 간 갈등, 개인정보 관련 범죄 노출, 일회용품 쓰레기 증가 등 그림자가 뒤따랐다.

특히 배달 앱과 같은 플랫폼 경제가 급속히 확장하면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자는 2020년 기준 약 179만 명으로 크게 늘었지만, 이들에 대한 보호막은 약하다. 이에 배달 종사자로 대표되는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교통사고 치료 및 보상에 대한 배달대행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산재보상보험 미가입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상향할 것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또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강력범죄 및 성범죄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막고, 배달 대행업체를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경우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라고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

코로나19라는 힘든 시기를 소비자와 배달 종사자는 함께 이겨내고 있다. 이들은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이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상생해야 할 존재다. 배려와 존중, 권익 보호를 통해 세상 곳곳에 더 많은 행복이 배달되길 기대한다.



# 권익을 찾아 스위치 ON




**권익 포커스는, 국민의 고충과 불편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의 활약상을 조명합니다. 이번 포커스에서는 70년간 잊혀진 6.25 영웅들을 유공자로 예우한 사례와 현장조정 이후 아파트 정문 앞에 안전한 통학로 설치공사가 착수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Writer.** 편집실



## #1
## 비군인 노무자의 6·25 전쟁 참선사실 확인 요구

"등본상의 나이와 귀향증의 나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일인 확인이 어렵고, 이에 참전사실 확인이 안된다는 건 부당합니다. 정확히 확인해 주세요."

### 무슨 일인가요?

고(故) OOO은 비군인 노무자로 6·25전쟁에 참전하여 1953. 1. ~ 1953. 6.까지 복무하였다. 이에 고인의 자녀 OOO는 2020. 7.국방부에 고(故) OOO의 귀향증을 첨부하여 참전사실 확인을 신청하였는데, 국방부에서는 "고(故) OOO의 제적등본상 생년월일(1915. OO. O, 귀향증 발급 당시 만 38세)과 귀향증 나이(45세로 기록)가 달라 동일인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OOO의 참전사실을 정확히 확인해 달라 요청하였다.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던 날, 어머니께서 홀태로 보리를 따고 계셨고, 언니와 오빠는 고목나무에 붙은 풍뎅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군복을 입고 계셨고, 저희를 보시고 "OO아(언니 이름)"하고 부르시면서 다리를 절룩거리며 다가오셨고, 언니는 아버지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강원도 38선 부근에서 짐을 짊어지고 배달을 하다가, 중간에 폭탄이 떨어져 파편을 맞고 쓰러졌고, 뒤에서 2명 정도만 살아남았다. 눈을 떠보니 조치원의 미군부대에서 수혈을 받고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른쪽 허벅지에 큰 상처로 인해 다리를 절룩거리셨고, 오른쪽 어깨에도 파편을 맞았는데, 파편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셔서 통증이 심하셨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수저를 들지 못할 정도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셨습니다."

### 어떻게 해결했나요?

귀향증 내용의 오기 가능성에 대하여, 6·25전쟁 당시는 현재와 같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행정기록이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행정착오, 누락 등의 사유로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이에 과거의 병적기록 등을 정정하여 참전을 인정한 사례도 존재한다.

고(故) OOO의 참전사실 인정에 대하여, 자녀인 OOO가 고(故) OOO의 참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귀향증 기재사항과 고(故) OOO의 개인정보가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이는 당시 공부상 기록관리 미흡에 따른 것으로서, 이름·주소 등 다른 정보는 모두 일치하고 연령만 달라 그 차이가 미미하며, 1900년~1920년 사이 OO군 OO리 소재 OOO(OOO)이 고(故) OOO 한 명으로 특정되므로, 귀향증 상의 OOO과 고(故) OOO은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고(故) OOO이 비군인 노무자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① 참전유공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등록을 위해서는 참전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참전업무 처리 훈령은 귀향증 원본을 참전사실 입증서류로 규정하는 점, ② 고(故) OOO의 제적등본과 귀향증 상 한자 성명, 주소 등 모든 개인정보가 일치하고 연령만 상이한데, OO시장이 2020. 10. "고(故) OOO 외에 1900년 ~ 1920년 기간 OO군 OO면 OO리에서 출생·거주한 다른 OOO(OOO)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을 볼 때, 귀향증 상의 OOO과 고(故) OOO은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점, ③ 피신청인은 "귀향증의 내용이 잘못 기재될 가능성도 있으나 그 가능성은 낮으므로, 귀향증에 45세라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발급대상자인 OOO이 스스로 45세임을 인정하고 귀향증을 수령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나, 군(軍)이 보유한 자료 상 확인되는 성명·주소·생년월일 등과 실제 개인정보가 상이하여 정

정된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으며, 육군인사사령부 병적민원과장도 2016. 10. 국방일보에서 “복무기록표에 기록된 생년월일, 성명, 주소와 가족관계등록부·호적 등에 기록된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확인 및 정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연간 2만여 건에 달한다.”라고 한 점, ④ 6·25전쟁 당시는 현재와 같이 체계적이고 명확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많은 행정기록이 수기로 작성됨에 따라 행정착오, 누락 등의 사유로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가 많아 오기 가능성이 있는 점, 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귀향증이 고(故) OOO을 대상으로 발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故) OOO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진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소명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故) OOO이 이미 사망한 현재 상황에서 유가족에게 과도한 요구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OOO가 제출한 귀향증은 고(故) OOO을 대상으로 발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신청인이 고(故) OOO의 6·25전쟁 참전 사실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고(故) OOO의 6·25전쟁 참전사실 확인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였다.

### 시사점

OOO의 6·25전쟁 참전 여부에 대해 재심의 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2021. 3. 4. 재심의를 실시해 OOO의 6·25전쟁 참전 사실 인정하였고, 국가보훈처는 2021. 3. 30. 국방부의 참전사실 인정을 근거로 OOO을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였다.

이에 OOO은 6·25전쟁에 참전한 지 70년 만에 참전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OOO의 손녀는 적극행정 국민추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조사 결과를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처리한 적극행정 사례로 추천하였다.

## #2
## 현장조정회의 통해 통학로 개설 등 종합적인 교통안전대책 마련

“보행로가 없어,
통학하는 학생들과
차량이 겹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 무슨 일인가요?

2008년 12월에 입주한 OO아파트(472세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800m 떨어진 OO초등학교에 걸어서 다니고 있다. 아파트 진입로와 출입구와 연결되는 폭 6m의 도로에는 보행로가 없어 차량과 학생들 간 접촉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OO아파트 입주민 431명은 학생들의 통학로 개설 등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 어떻게 해결했나요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며 OO아파트 주민회의실에서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과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경찰서 관계자, 한국전력공사 동대문중랑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동대문구는 경관녹지에 2m 이상의 통학로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는 경관녹지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 이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동대문경찰서는 통학로 주변 도로에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정내용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와 동대문구가 경관녹지를 통학로로 변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해 통학로 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경관녹지와 통학로의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이 가능함을 계속해서 설득해왔다. 그리고 현장조정 이후 1년 반의 시간이 흐른, 지난 6월 2일 드디어 정문 앞에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설치공사가 시작되었다.

관계기관들은 아파트 입주민들과 협의해 6월까지 경관녹지에 설치된 전봇대 등을 이설하고 8월까지 통학로 공사를 완료하기로 했다.

### 시사점

국민권익위는 OO아파트 통학로 개설 집단민원 해결을 계기로 전국 2,273개 초·중·고등학교 통학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전력공사, 도로교통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5,970개 관련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안전한 통학로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점검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개선전 모습 개선후 모습

# 권익이, 달라집니다!

## -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해 나갑니다.
## - #1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제도 개선 방안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 불공정과 특권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공정'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불공정한 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선을 국민과 함께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Writer.** 편집실

###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의 딜레마

2020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7만대. 인구 대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에 걸맞게 매년 60여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면허를 따기 위해, 자동차운전학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편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불공정한 검정료 환불 및 수강료 조정 제도에 부담을 느끼는 수강생이 많습니다.

물론 단순히 자동차운전학원의 수강료를 지나치게 인하한다면, 안전과 직결되는 운전 교육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운전학원이 수강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더라도 조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보니 수강생 입장에서 불공정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떤 문제가 있나요?

**1) 수강료와 시험 수수료의 편차 커**

기능검정의 경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험을 보면 22,000원인데 전문학원은 43,000원입니다. 도로주행검정 시험 수수료는 도로교통공단 25,000원 전문학원의 경우 55,000원으로 편차가 2.2배입니다. 교육여건이 다르므로 수강료 차이는 당연하지만, '과도한 차이'라면 조정이 필요하죠.

**2) 일방적인 공급자 보호,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

현행 공급자 중심 가격 조정제도는 교습원가를 낮추기 위한 경쟁과 학원의 노력을 저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1) 브레이크 안걸리는 운전면허 전문학원?**

경기도 내 일부 운전면허 전문학원들이 수년째 자체시험 검정비용을 도로교통공단보다 2배 비싸게 받고 있어 수험생의 불만이 높지만 경찰청 등 정부기관은 가격조정을 권고하는 데만 그치고 있다('20. 11. 언론보도)

**2)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천차만별'**

대학생 A씨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집 바로 앞에 있는 학원을 두고 5km 떨어진 옆 동네 운전학원을 다니고 있다. 수강료가 10만원 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같은 지역에 있고, 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교육을 받는데 10만원의 차이가 나니 의아하다.('18. 1. 언론보도)

## 국민신문고에서 살펴봤습니다

1) ㅇㅇ자동차전문학원의 일방적 장내(기능)시험 취소 통보에 대한 제재를 요청함. 전날 많은 눈이 내렸다는 이유로 장내기능시험 7분전 시험취소를 알리면서 시험을 볼 수는 있지만 탈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검정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함('18. 2. 국민신문고)

2)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대형면허 취득하려고 전문학원에 등록하였는데, 클러치 조작도 하지 못하는 나에게 불친절하고 성의없이 가르쳐 주고 있음. 학원에 클러치 조작 방법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환불받고 싶다고 하니, 다른 강사로만 바꿔줌('16. 3. 국민신문고)

3) 운전학원등록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너무 비쌈. 어제 재시험 보는데 44,000원이 들어감. 학원수강료 추가비가 너무 비싸고 부당함('14. 6. 국민신문고)

4) '18년 12월 20일경에 운전면허학원에 32만원을 입금하였음. 입금한 날 21일 밤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연락이 없어 다음날 다시 환불 요구. 교육을 받기 전이니 100% 환불해줘야 하지만, 개인사정이라는 이유로 10%를 감하고 환불해 준다고 함('18. 12. 국민신문고)

## 어떻게 개선할까요?

**1) 자동차운전 학원 수강료 조정범위 확대**

공급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의 균형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동차운전 학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과도한 수강료 등의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권 마련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4항 개정**

| 현행 | 개정안(예시) |
|---|---|
| 제110조(수강료 등)<br>① ~ ③ (생략)<br>④ 지방경찰청장은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110조(수강료 등)<br>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지방경찰청장은 수강료등의 과도한 인하 등으로 인하여 학원교육의 부실화가 우려되거나 과도하게 인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2) 조정요건의 불확정 개념을 구체화 합시다**

조정요건인 '과도한 수강료'는 불확정 개념이므로 시행령에서 산정 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및 전년대비 수강료 상승률, 원가산정 자료, 평균·적정 이윤율 및 입지 등을 감안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0조의2 개정 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개선방안을 고려한 조문 구성이 필요합니다.

**3)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검정료 환불규정 마련**

수강료와 검정료를 분리해야 합니다. 검정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여 검정료 환불관련 국민불편과 불공정을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이 시작되기 이전 수강료 및 이용료 전액에 대한 환불 규정이라든가 교육시작 후에는 미교육시간의 비율을 고려한 금액이 환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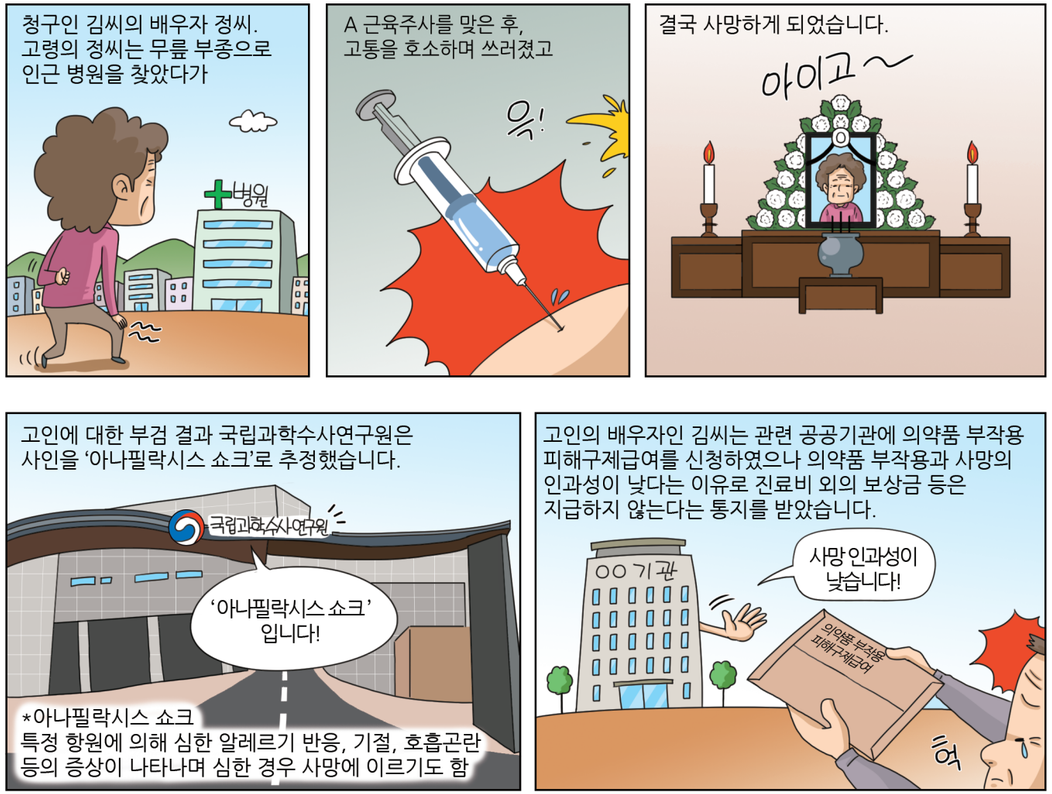
특히 현행 시행령에 없는 검정료에 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검정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 금액 전부를 환불해야 하며, 학원의 귀책사유로 검정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납부한 검정료의 전부를 환불하는 등 학원과 교육생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죽음,
# 국선대리인을 통한 행정심판 권리구제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사례 10**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해당 처분 행정청을 관할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한 권리구제 사례를 통해 행정심판을 통한 조정 절차를 살펴본다.**

**Writer.** 편집실



# 국민권익위 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사람들 — 기획재정담당관실

**한 대의 비행기가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항로를 살피고 안전한 방향으로 안내하는 관제탑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관제탑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은 조직 전체의 시각에서 위원회 업무전반을 기획·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각 부서 간 업무범위와 이견을 조정한다. 위원회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대외협력 창구 역할까지 담당하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을 찾았다.**

**Writer.** 배미진 **Photo.** 이현재

1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촬영했습니다.

##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는 곳

기획재정담당관실의 주요 기능은 크게 '기획', '평가', '예산·국회'로 나뉜다.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를 기반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예산집행을 통해 위원회 업무 전반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까지 한다. 대외적으로는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및 타 부처 등 외부기관과의 대외협력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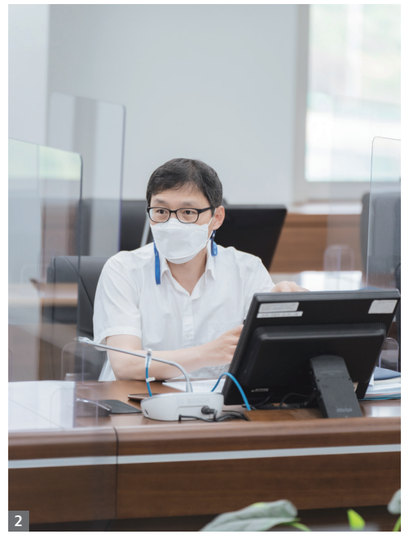
기획 분야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매년 초 전년도의 업무성과, 반성 및 정책여건을 토대로 연두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국정기조에 부합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회의체인 열린혁신전략회의, 정책현안점검회의 등 내부 회의체 운영을 통해 종합적으로 업무를 조정하고 주요 현안을 점검해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황민아 행정사무관은 "기획업무는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그린 밑그림을 각 실국에서 실행하면서 색칠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평가 분야는 위원회 업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업무로서 특정평가 대응과 자체평가 운영으로 구성된다. 특정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국정과제인 '반부패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과제와 주요정책과제 등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자체평가는 연초에 수립한 업무계획에 따라 업무성과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개선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 외부평가위원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재정담당관실은 국정과제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주요사업별 성과와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한다.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심의에 대응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 집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지원한다.

Responsible for Planning and Finance



2

1 국민권익위의 관제탑 기획재정담당관실

2 올해 상반기 가장 큰 성과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다

여기에 더해 국회 업무가 있다. 국회 일정에 따라 개최되는 정기회, 임시회 등에 위원회 업무보고를 하고, 국회 요구자료 대응과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협의 등을 진행한다.

## 청렴국가에 한 발짝 더 나아가다

올해 상반기 국민권익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안해 제출한 지 햇수로 9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 5월 공포됐고 1년 후인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남두 기획재정담당관은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에 이어 반부패 관련 법령의 체계가 완성됐다고 생각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한 차원 더 높은 청렴국가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3

기획재정담당관실의 주요 기능은 크게 '기획', '평가'와 '예산·국회'로 나눌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로, 실추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아우르는 전 국가 차원의 반부패·공정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혁신을 위한 각종 대책이 마련되었는데, 이러한 제도와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직접 마주하고 소통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릴레이 협약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고위직 공직자들의 청렴성 제고 및 공직사회 신뢰회복을 위한 결의를 대내외에 공표하는 계기가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각 지자체와 세부 협력사업과 청렴 실천행사 등을 병행해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계획이다.

## 장기적 관점에서 발전 방향 고민

2022년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지 15년이 되는 해이자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해로서 위원회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담당관실은 올해 하반기에 내년뿐 아니라 향후 10년 이후를 바라봐야 할 때라고 내다봤다.

4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릴레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남두 기획재정담당관은 "올해 하반기는 지난 15년 동안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과와 반성, 국민들의 요구 등을 분석하고 2030년 이후에 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좀 더 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담당관실은 올해 국민권익위가 강조해야 할 핵심키워드로 공정, 포용, 희망을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현 사회적 기준의 중심인 공정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고충이 큰 만큼 이들을 배려하고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5

기획재정담당관실은 올해 국민권익위가 강조해야 할 핵심키워드로 공정, 포용, 희망을 꼽았다.

Mini Interview

## 권익 보호의 최선봉에서

2019년 2월부터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연두 업무계획 등 각종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현안을 관리·조정하는 등 기획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업무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보다 성과를 내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우리 사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최선봉에 서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기관으로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아** 행정사무관

## 공정을 우선 가치로

지난 5월부터 정부 업무평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무조정실의 특정평가에 대한 대응과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 운영 및 성과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와 성과관리 업무를 할 때는 심판 역할을 하고 있고, 특정평가 업무를 할 때는 선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핵심은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성과 창출의 동기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공정을 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권익위의 위상에 맞게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현수** 행정사무관

# 아픔을 보듬는 치유의 섬

## 동백섬 只心島 지심도

울창한 숲길과 탁 트인 바다 전망. 섬이 아니라면, 아니 지심도가 아니라면 만끽할 수 없는 여행의 묘미다. 가슴 한 켠에 꼬깃꼬깃 접어놓았던 고민거리마저 내려놓을 수 있는 지심도에서 아픔을 보듬는 치유의 묘약 한 첩을 선물 받았다.

**Writer Photo.** 임운석(여행작가)

1

2

## 세월 속 지심도에 깃든 이야기들

장승포항 지심도 여행터미널을 출발한 지 15분. 수평선에 깎아지른 해안 절벽과 그 위에 푸른 숲이 우거진 섬이 마중을 나온다. 거제시 일운면에 속한 지심도다. 섬의 모양이 '마음 심(心)'자를 닮아 지심도(只心島)라 부른다. 옛날에는 다른 이름도 있었다. 섬에 숲이 울창해서 지삼도(只森島)라고 했다. 지심도를 '오로지 한 마음'쯤으로 해석한다면 지삼도는 '오로지 숲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는 요즘, 지친 마음을 숲에서 치유해야할 것만 같다. 그래서 수평선에 걸린 지심도가 더 반갑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속한 지심도는 작은 외딴 섬이지만, 섬 특유의 외로움을 찾을 수 없다. 숲이 우거져서다. 울창한 숲에는 분명 크고 작은 동물들과 곤충들이 공생 공존할 테니 외로울 겨를이 없을 것이다.

지심도는 동백나무가 유난히 많다. 섬 전체 수종의 60% 이상이 동백나무다. 지심도를 동백섬으로 부르는 이유다. 나머지 수종으로는 소나무, 후박나무, 육박나무, 맹종죽 등 40여 종이 더 있다. 이처럼 식물들이 오순도순 모여있으니 지심도는 대가족인 셈이다.

1 숲이 울창한 지심도

2 2월부터 4월까지 절정을 이루는 지심도의 동백나무 숲

일제강점기인 1936년, 일본은 지심도에 해군기지를 세웠다. 지심도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반도와 일본 대만도 사이의 대한해협을 지나는 길목에 있는 것을 십분 활용한 것이다. 일제는 지심도의 지형도 허투루 보지 않았다. 섬 주변이 천 길 낭떠러지인지라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제는 지심도에 경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와 방공호와 발전소 등의 다양한 군사시설을 설치했다. 지금도 당시의 상흔이 섬 곳곳에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포진지와 탄약고, 탐조등 보관소 등이다. 해방 이후에도 지심도는 국방부의 소유로 군사시설로 이용됐다. 2017년 3월에야 비로소 지심도의 소유권이 거제시로 반환됐다. 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장장 81년의 세월이 걸렸다.

지심도는 지형 특성상 선착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경사가 급한 비탈이다. 그래서 선착장을 뒤로하면 가파른 오르막을 오른 것이 지심도 여행의 시작이다. 지심도에는 15가구, 36명이 산다. 전기나 수돗물 사정이 나빴던 과거에는 더 적었다고 한다. 흔히 지심도는 섬이니까, 어업을 주업으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하지만, 주민들은 옛날부터 농업을 주업으로 삼았다. 배를 정박할 곳이 여의치 않은 섬의 특성 때문이다.

대신 톳이나 미역 같은 해조류를 채취한다. 농사는 주로 보리와 밭농사 위주다. 한때 방풍나물이 유명했지만, 요즘은 그마저 시들해졌다. 사람이 살기엔 너무나 척박해 한숨만 나올 것 같지만, 섬의 자연환경 만큼은 원시림 그 자체다.

## 지심도엔 생명의 기운이 넘친다

지심도 여행은 계절에 따라 여행의 이유가 나뉜다. 많은 사람이 찾는 봄에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지만 동백꽃 탐미 여행이 우선이다. 동백꽃이 피는 2월부터 4월까지가 절정이다. 이 무렵 지심도는 동백나무, 숲길, 지붕, 마당 할 것 없이 지천이 동백꽃이다. 동백꽃은 가지에 매달렸을 때도 아름답지만, 땅에 떨어졌을 때도 매혹적이다. 가장 화려할 때 작별을 고하는 그 처연한 모습이 가히 치명적이다.

3

1938년에 지은 전등소 소장의 사택으로 지금은 카페로 사용 되고 있다.

4

지심도 선착장에 그려놓은 벽화

지심도의 맑은 공기에
새소리까지 들으며 걷는다면
트레킹의 고단함을 잊게 하고
바닷바람이 온몸을 휘감을
때면 콧잔등에 난 땀방울쯤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니
뭍에서부터 애써 챙겨온
상념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기에
그만이다.

여름에는 울창한 동백숲과 탁 트인 바다를 조망하며 트레킹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지심도 트레킹은 순환형 코스지만, 바다를 등지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편이 좋다. 선착장을 지나 가파른 언덕에 오르면 본격적이 트레킹이 시작된다. 이후 동백하우스, 일본군 소장 사택, 지심분교, 포진지, 탐조등 보관소, 해안선 전망대, 동백꽃길, 선착장으로 이어진다. 전 구간을 다 걸어도 1시간 30분이면 거뜬하다. 하지만 여행은 운동이 아니다. 자박자박 발걸음을 옮기며 숲이 주는 넉넉함을 느끼며 걸어도 좋다. 그래도 2시간이면 충분하다.

여름 지심도는 붉은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거나 레드카펫이 연상되는 동백 꽃길은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그늘이 넉넉해 걷기에는 딱 좋다. 특히 갯내 물씬한 바닷바람이 온몸을 휘감을 때면 콧잔등에 난 땀방울쯤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 뭍에서부터 애써 챙겨온 상념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기에 그만이다. 동백나무 숲에는 햇빛 한 줌 비집고 들지 못할 만큼 울창하다. 지심도가 자랑하는 동백나무는 전부 토종이다. 동백숲에는 동박새가 많이 서식한다. 낮에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새소리는 종종 들린다. 맑은 공기에 새소리까지 들으며 걷는 맛은 여름 트레킹의 고단함을 잊게 한다. 한여름 동백꽃은 지고 없다. 대신 빛깔 고운 동백잎이 눈을 시원하게 해준다.

5 일제가 설치한 포진지

6 지심도 역사관으로 사용되는 탄약고

동백하우스를 비롯해 지심도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은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것으로 현재는 개보수를 거쳐 사용 중이다. 동백하우스는 일본군 소장 관사였고, 카페로 사용되는 건물은 전등 소장 사택이다. 다른 건물에 비해 보존상태가 좋고 건축 당시의 모습으로 보수를 해 일본식 가옥의 형태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 지심도 전등소는 포대 완공과 더불어 1938년 1월 27일 세워졌다. 전등소는 기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소와 소장 사택, 막사 등 부속 건물이 있었다고 한다. 전등소 사택을 지나면 맹종죽 숲이 이어진다. 맹종죽은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 자생하는 수종으로 대나무 중 가장 굵다. 지심도 주민들은 한때 맹종죽의 죽순을 재배해 생계를 꾸려갔다. 맹종죽 숲길을 지나자 탐조등 보관소에 닿는다. 탐조등은 서치라이트 역할을 했다. 조금 떨어진 곳에 탐조등과 함께 쓰였던 방향 지시석이 있다. 높이 30cm 정도 되는 이 지시석은 지심도 주변 지역을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됐다. 모두 6개가 있었는데 남은 것은 5개로 거제 장승포, 부산 가덕도 등대와 절영도, 일본 대마도 남단을 가리킨다.

지심도 해안선에서 바라본 바다풍경

7

8 거제도 대표명소 바람의 언덕

길은 해안선을 따라 전망대까지 잇댄다. 수평선이 아스라이 펼쳐진다. 고깃배가 망망한 바다에 길을 내며 오간다. 어느 순간 그 물길은 마음속까지 밀고 들어온다. 그리고는 마음 한켠에 쉼표하나가 찍고 다시 바다로 떠내려간다. 육지와 떨어져 바다에 둘러싸인 섬은 외로움의 대명사처럼 여겨지지만, 오히려 탁 트인 전망이 있고, 육지와 다른 여유가 있어 아픔까지도 보듬어 줄 것 같다. 가슴 깊은 곳에 바다 냄새로 한껏 충전하고 다시 배에 오른다. 입도할 때 가져왔던 고민은 섬에 내려놓아서 그런지 몸도 마음도 가볍다. 섬 여행의 묘미에 빠져든다.

## 이곳까지 챙겨보면 금상첨화

바람이 주인공인 장소가 있다. 지심도와 함께, 거제시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한번은 찾는 바람의 언덕이다. 푸른 바다와 하늘, 드넓은 초원이 이곳의 자랑이다. 이 동화 같은 풍경에 매료되어 수많은 드라마가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됐다. 바람이 워낙 강한 곳이라 이곳에 자생하는 식물들은 대부분 키가 작은 편이어서 언덕에 서 있는 풍차가 더 돋보인다. 바람의 언덕 초입에 있는 도장포선착장에서는 외도와 해금강 유람선이 출항한다.

가져왔던 고민은 섬에 내려놓고 몸도 마음도 가볍게 떠나는게 섬 여행의 묘미이다.

바람의 언덕 맞은편에는 신선대가 있다. '신선이 놀던 자리'라는 뜻인데 그 경치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신선대에서 봉긋한 큰 바위의 이름은 갓바위인데 웅장한 기암괴석과 바다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풍경은 세상을 벗어난 선계의 모습을 흡사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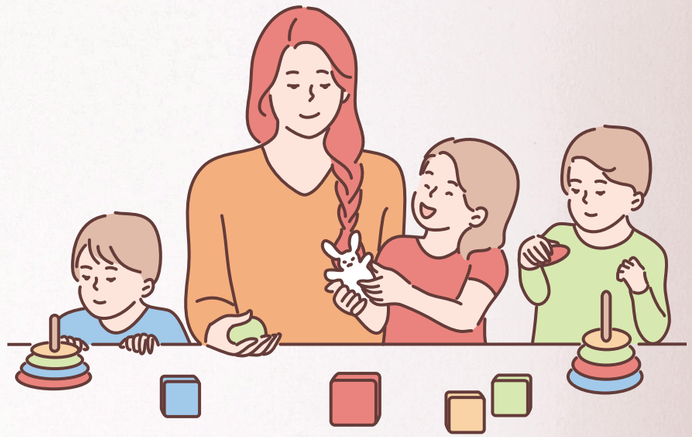
**여행 팁**

- **내비게이션 정보** : 지심도로 가는 배는 두 곳에서 탈 수 있다.
  장승포항 : 오전 8시 30분 첫배, 이후 10시 30분, 12시 30분, 오후 2시 30분, 4시 30분에 있다.
  지세포항 : 오전 8시 45분 첫배, 이후 10시 45분, 12시 45분, 오후 2시 45분, 4시 45분에 있다.
- 두 항구 모두 돌아 나오는 배편이 20분 뒤에 떠나므로, 마지막 배편은 섬에서 숙박할 여행객만 이용해야 한다.
- **문의** : 지심도 055-681-6007, 거제시청 관광과 055-639-4172

# 청렴은 당연한 것

**2020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기 부문 최우수상**

**Writer.** 박소현



청렴은 이제 캠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렴은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고, 습관이고, 당연한 것이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스며들어 문화가 되어야 한다.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겠다던 스물여섯 살 9급 공무원 아가씨는 어느 틈에, 왜 그랬는지도 모르게 아이를 셋이나 낳은 마흔 살의 아줌마가 되어 있었다. 예상하지 못했던 셋째가 생기는 바람에 내리 5년을 쉬게 되었고, 그사이 '오늘 저녁은 뭐 먹지?'가 하루의 가장 큰 고민인 평범한 주부가 되었다. 아이들을 놀이터에 풀어놓고 수다를 떨던 동네 아줌마들은 내가 공무원이라 다시 사회생활을 할 것임을 알게 되면 세상 부러워했고, 나 역시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든든해지곤 했다.

다행히 복지가 좋은 공무원인지라 돌아갈 자리가 있었고, 남편이 휴직을 하고 아이들을 봐준다고 지지해 준 덕에 복직 신청을 했지만, 몇 년을 아이만 키우면서 동화책만 읽던 내가 그동안 수없이 개정된 세법과 시스템에 적응할 생각을 하니 밤잠을 설칠 정도로 두려워졌다. 심지어 좀이 쑤셔서 어서 복직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내가 복직 날이 손꼽을 만큼 가까워지니 두려움에 눈물을 쏟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을 물릴 수는 없었고, 복직하는 그날이 왔다. 모든 것이 변했고, 무엇보다도 내가 변했다. 기존에 알던 지식은 잊어버린 것이 대부분이고, 그나마 기억나는 지식은 개정되어 쓸모가 없었다. 전문 용어는 고사하고, 보고서에 쓸 만한 적절한 단어들이 생각나지 않았다. '맘마', '까까' 같은 유아적인 단어들만 쓰던 내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서를 쓰려니 막막해졌다.

수년 만에 복직한 회사도 내가 변한 만큼 달라져 있었다. 윗사람 눈치를 봐야 하는 만큼 아랫사람 눈치를 봐야 하고, 저녁 회식 대신 점심 회식 문화가 생겼고, 익명게시판과 공무원노조가 생겼다. 근무평정에 대한 순위와 점수가 공개되었고, 의문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다. 심지어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까지 했다. 아래 직원들 사이에는 할 말은 하는 문화가 생겼지만, 윗분들은 여전히 정당한 항의를 용납하지 않으셨고 연공서열을 따지셨다. 신·구가 묘하게 엉켜 있는 조직이 되었다.

모든 것이 달라진 듯했고, 뒤로 후퇴한 내가 앞으로 뛰어간 조직에 예전처럼 적응할 수 있을지, 일할 수 있을지,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그리고 걱정투성이인 내 앞에 툭 떨어진 주제는 '청렴'이었다.

내가 다니는 시청은 청렴 동아리, 청렴 캠페인, 청렴 챌린지, 청렴 워크숍, 청렴 표어 등등 떨어진 청렴도 순위를 높일 수 있다면 무엇이든 허락된 청렴의 향연장이었다. 청렴 동아리를 구성해서 그 실적으로 부서 평가 점수를 매긴다고 했다. 모든 부서에서는 앞다투어 청렴 동아리를 만들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실적을 만들어서 보고했다. 하루는 청렴 강의를 들었다고 했고, 하루는 청렴 챌린지를 해 인증샷을 찍고, 하루는 표어를 만들고, 하루는 음주운전 교육을 했다. 그리고 그런 실적들은 문서가 되어 우리의 치적이 되었다.

새올 게시판(공무원들의 사내 게시판)에는 청렴 동아리 실적을 위해, 부서의 가점을 위해 너도나도 올린 청렴 관련 게시물들이 읽어볼 새도 없이 쌓였다. 물론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 가운데에 내가 있었다. 오랜만의 복직, 빨리 적응하고 싶은 열망에 누구보다 청렴한 척했지만, 사실 나는 모순덩어리였다.

나의 업무는 체납자들을 독려해 체납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일이었다.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을 압류하고, 부동산을 공매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왔다. 그들은 언제나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세금을 내지 못한다 했다. 수억의 부동산을 팔아 수천만 원의 체납액이 있지만, 현재는 돈이 없다고 누가 교육한 것처럼 한결같이 말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한결같이 대하지 않았다. 이성적이고 점잖은 체납자에게 더 가혹했고, 소리 지르고 욱박지르는 체납자는 분납 기한을 여유 있게, 분납금을 적게, 체납 처분을 느슨하게 해주었다. 공정하지 못했다.

또 나는 상사의 업무 외적인 지시를 거절하지 못했고, 심지어 후배들에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함께하자고 했다. 근무시간에 업무 외적인 일에 열과 성을 다하는 날이 있었고, 작은 성과를 과대 포장했다. 하지만 그런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고, 심지어 누군가는 일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것이 바른 행동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의문을 풀 새도 없이 나의 하루는 지나갔고, 틈틈이 청렴 관련 셀정 사진을 찍었고, 나의 허울뿐인 청렴 실적은 A4 종이 위에 새겨졌다.

종이 위의 청렴, 모니터 안의 청렴. 그것이 진짜인가?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었다. 이상하게 아이들은 똑같은 책을 열 번 스무 번 읽어 주어도 언제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반응해 주었다. 그날도 안 보고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수없이 읽어 준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책을 읽어 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아기 돼지 삼형제는 처음으로 내게 '왜?'라는 질문을 던졌다.

첫째 아기 돼지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짚을 얻어서 집을 짓고, 둘째 아기 돼지는 마찬가지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무를 얻어서 집을 지었다. 그리고 역시나 셋째 아기 돼지도 지나가는 사람에게 벽돌을 얻어서 튼튼한 벽돌집을 지었다. 모두 알다시피 셋째 아기 돼지의 집만 빼고 모두 늑대의 입바람에 날아갔고, 셋째 아기 돼지의 벽돌집만이 온전했다.

늘 평범했던 동화책이 내 머리를 맴돌던 청렴과 맞닿으면서 온통 의구심으로 가득 채워졌다.

왜 아기 돼지들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짚과 나무와 벽돌을 얻었을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왜 셋째 아기 돼지는 벽돌집이 가장 튼튼한 집인 것을 알면서도 형들과 공유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과연 청렴한 행동이었는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고,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지식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무의식중에 아이들에게 알려 주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아니 세뇌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런 의구심은 동화책마다 들었다. 『백설공주』에서 새 왕비는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사냥꾼에게 명령했다. 그러나 사냥꾼은 차마 백설공주를 죽이지 못하고 도망가게 했고, 사슴의 심장을 백설공주의 심장이라고 속여 왕비에게 바쳤다. 도망친 백설공주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밥을 먹고 잠을 잤다.

왜 왕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용무를 사냥꾼에게 시켰고, 왜 사냥꾼은 왕비의 갑질을 당당히 거절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왕비가 부당한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거짓으로 보고해도 되는 걸까? 왜 백설공주는 허락도 없이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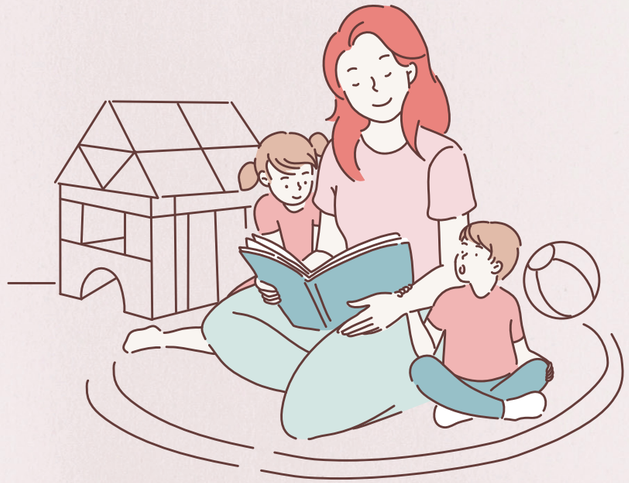
상사의 갑질이 당연시되고,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극히 당연하게 그리고 있는 동화책들을 아이들에게 읽어 주면서 우리의 문화가 청렴해지길 바라는 모순이 또 어디 있겠나 싶었다. 어릴 때부터 물들여진 부조리를 뜯어내려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하는지 알 것이다. 우리의 청렴의 시작은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허공에라도 알리고 싶었다. 나의 세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해.

그러던 와중에 청렴 수기 공모가 있다고 해서 정말 부족한 글솜씨라 부끄럽지만 몇 줄 끄적이려다 그간의 수상작을 몇 편 읽어 보았다. 모두 가슴 묵직해지는 감동이 있었지만, 대개의 스토리가 비슷했다. 과거 회사 포인트를 가져다 쓰는 등의 부패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었고, 그것은 부패였지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우리 사회에 녹아 있었다. 아주 만연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멍청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심지가 굳은 어른께서 그것이 잘못임을 알려 주셨고, 그로 인해 글쓴이의 청렴을 일깨워 주셨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여기서 나는 이 부분에 주목했다. 만연한 부패 문화와 과거형의 청렴 실천.

부패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듯이 청렴이 우리의 생활이 되려면 아주 자연스럽게 시작되어야 한다. 아이들의 동화에, 동요에, 학교에, 놀이에 무의식적으로 녹아 있어야 한다. 아침에는 잠에서 깨고 저녁에는 잠드는 것을 누가 우리에게 주입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청렴은 이제 캠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청렴은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고, 습관이고, 당연한 것이어야 한다.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스며들어 문화가 되어야 한다.



이제 청렴은 진화했다. 뇌물 수수 금지, 청탁 금지, 공적 자원의 사적 사용 금지 등과 같은 제도의 청렴은 과거의 청렴이 되었다. 지금은 갑질 안 하기, 정당하게 거절하기, 틀린 것을 인정하는 용기, 소신 있는 업무 처리, 나의 의무와 책임을 지키는 것과 같은 사고의 변화가 곧 청렴이 되었다.

습관처럼 고치기 힘든 것이 관념이다. 굳어진 첫인상을 뒤집기가 얼마나 힘든가. 반대로 청렴이 굳어진다면 얼마나 굳건하겠나. 청렴이 관습이 되고 관행이 되면, 그것은 또 관념이 되고 문화가 될 것이다. 나부터 어떤 체납자에게든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리라고 다짐해 본다. 그래서 작은 시작이 관행이 되어 변함없는 진리가 되도록.

나는 동화책을 읽어 주면서 틈틈이 세 아이들에게 말해 주었다.

"승빈아, 벽돌집이 튼튼한 줄 알았으면 동생들에게도 같이 튼튼한 집을 짓자고 알려주는 게 어떨까?"

"유빈아, 먹고 싶으면 돈 내고 먹는 거야."

"예빈아, 하기 싫은 건 '나 그거 하기 싫어요'라고 말해야 하는 거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콩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새어머니, 새어머니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콩쥐, 불의를 보고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 묵인한 팥쥐, 신데렐라를 찾는 개인 용무에 직원을 동원한 왕자, 신원을 속이고 무도회에 참석한 신데렐라. 우리의 책장에 꽂혀 있는 동화 속 온갖 부조리들이 혹여나 내 아이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을까 동화책을 읽어 준 후 꼭 되물어 본다.

"그것은 과연 바른 행동이었을까?"

#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 국민생각함 활용 지침 개선 사례

##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의 불편요인 개선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건전한 토론과 협업을 통해 더 좋은 정책으로 구현해나가는 온라인 정책소통 플랫폼(www.idea.epeople.go.kr)이다. 이번 호에서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현된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의 불편요인 개선' 사례를 살펴본다.**

### 배경과 문제점

고가 교복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 시행 및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교복가격이 안정화된 대신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불편요인이 다수 발생했다. 특히 높은 추가금, 바지교복 선택권 제한, 낮은 품질, 촉박한 구매기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

### 불편사례

**(가격)** 교복을 맞추며 여분의 와이셔츠나 바지를 구입하는데 단가가 비쌈. 와이셔츠 한 장에 인터넷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을 받음. 교복을 싸게 낙찰 받아 추가 구매 분에 차액을 얹어서 판매함(2020. 4. 국민신문고)

**(품질)** 공동구매 교복 원단은 수준이하임. 학생들이 농담 삼아 사포 같다고 이야기 함. 학생들은 적당히 참고 입거나 돈을 들여 수선해야함. 교복을 선정했으면 품질에 책임을 지기 바람 (2019. 6. 국민신문고)

**(치수측정기간)** 교복 치수측정기간이 3일이고, 안내문에도 "반드시 기간 내 측정하셔야 교복지급이 가능합니다"라고 함. 맞벌이 학부모들은 이 기간에 방문할 수 없는데 3일로 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함(2020. 1. 국민신문고)

**(바지교복)** 바지로 주문하려하니 여학생은 치마로 기본 셋팅이 되어있어 바지로 전환이 안 되며 추가금액을 내야지 주문이 가능하다고 함. 남학생(바지), 여학생(치마)로 규정해 단순한 선택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임(2020. 1. 국민신문고)

### 관련 설문조사

2020년 5월 8일 ~ 15일, 114명 참여

**이 문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교복 품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71.1%** 거칠고 불편

교복 치수측정 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86.6%** 주말 필수

교복 구매에 있어 '자켓과 셔츠 중에는 자켓 가격이 더 높아야 한다', '여학생의 바지교복 착용은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 비율이 높았으며 불편함이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임.

### 제도의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와 관련한 국민신문고 민원 등을 토대로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 해결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첫째,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과도한 비용책정이 되는 것을 방지할 것 ⇨ **입찰시 가격적정성을 평가 기준으로 반영**
둘째, 교복의 품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 ⇨ **현행화된 혼용률을 입찰공고에 반영하고 납품 후, 표본조사하여 교복 품질 개선**
셋째, 교복 치수 측정시 충분한 기간을 갖게할 것 ⇨ **교복 치수 측정시 보호자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말 반드시 포함**
넷째, 신청양식 내에 바지와 교복 선택권을 부여할 것 ⇨ **교복 신청양식에 여학생 하의 품목을 '스커트/바지'로 선택가능하도록 표기**

"교복을 선정할 때는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입장에서 품질·디자인, 성인지 감수성 등의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합니다. 앞으로 교복 관련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독자의 소리

지난 2021년 <봄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조효순(전남 곡성군)**
'꿀을 찾은 벌과 꿀에 빠진 개미'라는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기분야 수상작을 읽고 잔잔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용기 내어 고백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앞으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양심을 지키고 싶다는 글쓴이에게 큰 응원을 보냅니다.

**황자하(광주광역시)**
<국민의 생각이 정책이 됩니다> 코너의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아동급식카드 이용 개선 사례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일선 현장의 불편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통해 관련 매뉴얼이 개선되었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아동들이 급식카드를 이용하면서 불편함이 없길 바라고, 관련기관들의 빠른 개선조치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준길(경기도 의정부시)**
TV뉴스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소식을 듣고 내용이 궁금했었는데, 국민권익 소식지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법이 시행되어 청렴한 공직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모한나(인천광역시)**
대한민국 국가청렴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가장 눈길이 갔습니다. 그동안 '청렴'이라고 하면 남의 나라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정말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자랑스럽고 뿌듯하기까지 합니다. 청렴을 위해 애써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귀숙(부산광역시)**
정부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한센인들에 대해 주거복지 및 환경문제가 개선되고, 관련 실태조사까지 진행된다는 소식에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한센인들의 인권 회복과 권익 신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익위 열독왕

<국민권익>을 꼼꼼히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QUIZ.
경찰 분야 국민의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를 해결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 센터'가 출범했다. '○○○○○○ 센터' 출범에 따라 민원인은 접수단계부터 집중 상담을 받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지난호 정답 | 이해충돌 방지법 | |
|---|---|---|
| 정답자 | 장우익(강원도 동해시)<br>임흥재(경기도 고양시)<br>서수련(울산광역시) | 배명순(인천광역시)<br>이정숙(서울특별시 관악구) |

<국민권익>을 읽고 소감과 의견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모두 열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국민권익>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21세기 금도끼 은도끼
청렴 주인공을 찾습니다.

총 상금 4,700만원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 수필, 시, 웹툰/포스터/일러스트 : 2021. 06. 14 ~ 09. 10
● 영상, 노래 : 2021. 07. 01 ~ 10. 04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공모주제
가정, 학교, 직장 등 일상에서 경험한 청렴 및 양심 관련 사연
내가 바라는 청렴 · 공정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관행화된 갑질 문화에 대한 경험 또는 생각

공모분야
① 수필 ② 시 ③ 웹툰/포스터/일러스트 ④ 영상 ⑤ 노래

2021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www.integritycontents.kr

문의사항
운영사무국 ☎ 02-334-9044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